

“서부발전,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거의 안 했다”

8 김한주 기자 | 2020.09.15 16:04

2020년 발전소 내 산재 19건, 모두 '비정규직'

서부발전, 하청 위계 구조 존속... 권고 정면 부정

공공운수노조 “권고안 이행 점검,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부발전(주)이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실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산재 사망을 불렀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적재 작업 중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됐지만, 같은 현장에서 사망자가 또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발전소 내 산업재해는 19건이나 발생했다. 재해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부발전(주)는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량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는지 감독하지 않았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위험천만한 발전소 내에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사고 직후 서부발전(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본부장은 15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가 주최한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발전이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화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정종배 기자

특조위는 연료·환결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서부발전(주)은 하청 위계 구조를 그대로 뒀다. 또 안전보건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서부발전(주)은 하청 노동자 의견을 안전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다른 권고 사항인 발전소 산업 보건의 위축과 응급의료체계 확립도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서부발전(주)은 김용균특조위에서 제안한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행 감시가 따르지 않자, 서부발전(주)은 2인 1조 근무에 계약직 인력을 투입했다. 도급계약서 상 직접노무비도 여전히 하청에서 착복하고 있었다. 원청 책임 강화 권고가 나왔지만, 서부발전(주)은 이번 사고 때도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기 바빴다.



이태성 발전노조 사무처장이 15일 기자회견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문구가 적힌 안전모를 쓰고 있다. © 정종배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번 사고 스크루 반출정비공사 계약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뒷전으로 미뤘다. 또 원·하청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라고 했지만, 발전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발전소 내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며 "고용은 외주화해도 책임을 외주화할 수 없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여전하기에 산재 사망이 되풀이된다. 지금껏 특조위 권고안 미이행을 모른 채 한 정부와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특조위 권고안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의 한 참석자가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정종배 기자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